

강진군 이장단 “장묘문화 개선”

화장장 유치 나섰다

추진위 구성 … 주민 7,500명 서명

강진군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 협오시설인 화장장 유치에 나섰다.

강진군 이장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각 마을별로 ‘화장장 유치’ 서명운동을 벌여 현재 7천 500명의 주민으로부터 유치서명을 받아냈다. 이장단은 오는 5월 초까지 8천명 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낼 계획이다.

군 이장단은 서명운동 종료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강진군에 화장장 유치를 건의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강진군은 이장단의 건의가 들어오면 화장장의 수익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해 유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화장장 유치가 확정되면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화장 시

설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게 되며 이 가운데 70%의 예산은 국비로 지원된다.

김영기 강진군 여성복지팀 담당은 “아직 군 차원에서 화장장 유치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으나, 주민들의 건의서가 들어오면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벌일 예정”이라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화장장 설치를 건의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군 이장단은 이처럼 협오시설인 화장장 유치에 적극 뛰어든 것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묘지 문화로 인한 환경훼손, 학가족 및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대적 흐름 등에 따른 것이다.

/김정식 강진군 이장단장은 “농촌

지역의 노령화에 따라 매년 사망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문화의 확대를 위해 화장장 유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강진에 화장장을 유치하면 영암, 해남, 완도, 진도, 장흥 등 인근 지역의 화장 수요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이장단장은 또 “자녀들이 모두 도시로 떠난 농촌에선 조상 묘지의 별조 문제도 사회문제가 될 정도”라면서 “화장문화의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환경 파괴도 막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지역에는 목포, 순천, 여수, 광양 등 단위 4곳에 화장시설이 설치돼 운영중이다.

/김정식 강진군 이장단장은 “농촌



보성차밭 그림같은 풍경

신록이 짙어가는 5월을 앞두고 보성 녹차밭에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워치링기자 jrwi@kwangju.co.kr

함평군 농협통합 RPC

‘나비 라이스센터’ 가동

함평군 농협통합RPC(대표 전현주)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친환경 GAP 위생 클리도정공장 ‘나비 라이스센터’를 설립,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사진>

지난 25일 열린 준공식에는 이낙연 국회의원, 농협중앙회 김경진 경제대표이사, 이석형 군수를 비롯해 400여명의 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나비 라이스센터’는 농림부가 실시한 ‘2007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최종 평가에서 선정돼 시설현대화 사업 20억원 등 사업비 42억 6천만원이 투입됐다.

전현주 대표이사는 “친환경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과 최첨단 정미도정시설로 고품질 쌀 생산시스템을 구축,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 최고 품질의 함평 나비쌀을 생산·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화순군, 전국 최초 ‘농식품지원과’ 신설

가공·유통 기능 강화로 정주여건 개선

화순군이 전국 자체 최초로 농식품지원과를 신설한다.

화순군은 농식품의 가공·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인 농식품지원과를 새로 설치하고, 인허가과와 종합민원과를 통합키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

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화순군이 농식품지원과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농업에도 경영의 개념을 도입해 돈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완도군외면 복지회관 준공

완도군외면 종합복지회관 준공식 및 ‘제 6회 완도대교 바다축제’ 개막식이 지난 23일 군외면사무소 앞 해변도로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호 국회의원, 김영록 국회의원 당선자, 김종식 군수, 김두식 해경서장, 정완봉 바다축제추진 위원장을 비롯해 군의원,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 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군외면 복지회관은 사업비 15억 2천 700만원이 투입됐으며, 군외 보건지소가 함께 들어섰다.

이에 앞서 군은 22일 생일면 덕우도에서 경로당과 침질방 등을 갖춘 도서형 경로복지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된다”고 말했다.

/장성=정필수기자 bungy@

군내 문화재 체험학습

영광군, 고교생 대상

영광군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군내 문화재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영광지역 고교생 220여명은 이달 초부터 3차례에 걸쳐 불갑사와 내산서원, 신천리 3층석탑, 백제불고초초도래지, 원불교 영광성자·백수해안도로 등 지역내 주요 문화재를 탐사하고 있지만 오는 7월께 풀 가동되며 고용인원이 60여명으로 늘어나게

허위사실 유포자

‘경고’ 처분 논란

함평군 선관위

지난 4·9 총선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함평군 선관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4·9 총선 기간 동안 A후보 지지자였던 K씨는 ‘경쟁자인 B후보가 금품을 살포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함평군 선관위는 K씨에게 수차례 걸쳐 출석 요구서 발송과 임의동행을 시도했으나, 관내를 벗어나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K씨는 선거가 끝난 직후 함평군 선관위에 출두해 혐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관위는 K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와 251조 후보자 비방죄 등을 적용해 경고처분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후보자 비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경고처분에 그친 선관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함평군 선관위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주민을 계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상대 후보 캠프에서 처벌을 원치 않은 점도 경고처분 결정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A/S까지 회고의 품질로 보답드리겠습니다.

